**보도자료 초안**

한국경제학회(회장: 정진욱 교수)는 환경부와 함께 「환경-경제 시너지 창출과 갈등해소를 위한 정책과제 마련」이라는 주제로 연구용역을 수행하였다. 이 연구용역에서는 글로벌 화두로 부상한 탄소 중립과 관련하여, 한국의 개별 산업이 직면한 위험도에 대한 총체적이고 객관화된 근거를 마련하고자 ‘산업별 이행 취약성 지표(Transition Vulnerability Factor, 이하 TVF)’를 추정하였으며, 경제학계 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5차에 걸친 포럼을 통해, 기후 변화에 관련된 여러 이슈에 관해 다각도로 논의하여 찬반 양측의 의견을 균형 있게 수렴하였다.

지난 11월에 개최된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전지구적 계획이 추진되고 있으며, 특히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저탄소 경제 이행이 국가적 과제가 되고 있다. 한국은 국가 전체적으로 기후변화와 관련된 물리적 리스크(즉 날씨, 기상변화 등)는 높지 않으나, 상당한 이행 리스크(높은 에너지 소비, 석탄 고의존도, 늦은 대처 등의 이유)에 노출되어 있으며, 개별 산업별로 직면한 위험의 종류와 크기가 상이하다.

따라서 학회는 연구용역을 통해 산업별 물리적 리스크와 이행 리스크를 총체적으로 고려한 객관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32개 대분류, 78개 중분류 산업에 대한 TVF를 구축하였다. 여기서 TVF란 ‘한 단위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필요한 직간접 탄소 배출’을 경제 전체 평균으로 보정한 값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직관적이고도 간편하게 산업별 취약도를 측정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장점이 있다. 추정결과에 따르면, 32개 대분류 산업 중 TVF가 가장 높은 산업은 1차 금속 제조업이며, TVF가 높은 산업들의 대외 수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5차에 걸친 전문가 포럼은 다음의 주제로 진행되었다. 1차 ‘에너지 효율성과 CO2 배출의 변동’, 2차 ‘EU 탄소국경조정 논의 및 시사점’, 3차 ‘지속가능정책과 기업의 행동’, 4차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디지털 넛지’, 5차 ‘기후변화 대응 기술투자 수요’이다. 이 중 1차의 경우 대표적인 거시계량모형인 DSGE 모형을 확장한 ‘E-DSGE 모형’을 통해 에너지 효율성과 탄소 배출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는데, 정부와 민간이 에너지 효율성 증대 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면 탄소 저감 정책이 경제 성장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다고 시사하였으며, 또한 주거 부문의 탄소 배출 감소를 통해 탄소 총량을 억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2차에서는 현재 EU에서 추진 중인 탄소 국경 조정(탄소함량이 높은 상품에 대한 관세 부과)과 관련하여, 수출에 참여하고 있는 국내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다 우호적인 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국제적 협력이 필요함을 논의하였다.

3차에서는 탄소 배출 감축과 관련하여 국내 기업들의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 정부가 환경과 관련된 상생 비전을 제시함과 동시에 완급 조절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혼합하여 실시할 것을 제안하였다. 4차에서는 실험경제학에서 널리 쓰이는 기법인 ‘넛지(Nudge)’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전력 사용을 감소시킬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보다 정확한 연구를 위해 민·관이 함께 무작위 통제 실험(RCT)을 설계하고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5차에서는 한국의 탄소중립 정책이 야기할 에너지 시스템 변화에 대해 여러 시나리오별로 평가하였는데, 탄소중립을 위한 기술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사각지대를 없애는 가운데 학술적 연구가 토대가 되어야 함을 설명하고, 현 단계의 분석에서는 모형 및 데이터에 한계가 존재하므로, 추가적인 분석이 실시되어야 함은 물론 정부가 관련 데이터 공개를 확대하여야 함을 피력하였다.

**- 첨 부 –**

첨부①: 환경부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Part 1: 정책여건 및 문헌연구

첨부②: 환경부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Part 2: 포럼 및 정책제언